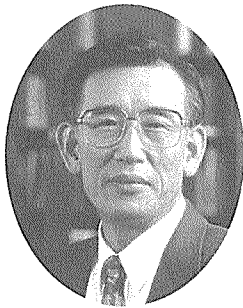




2000년도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오 동 휘

< 동원경제연구소 사장 >

2000년의 총괄경제지표를 보면 우리경제는 전년에 이어 건설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GDP 성장률은 8.8%에 달하여 잠재성장률(5~6%) 수준을 웃돌았고 경상수지는 10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2.3%의 상승에 그쳐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은 전년 말의 6.3%에서 4.2%로 줄어들어 그야말로 우리경제는 성공적인 안정성장을 과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범적인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의식은 2분기 중에 있었던 총선 이후부터 높아지다가 4분기에 들어서는 위기의 식으로까지 고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연초에는 1,059포인트로 출발했던 종합주가지수는 5월말에 731포인트까지 떨어졌고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반등국면을 보이다가 7월중순경부터 하강세로 전환하여 최근에는 500포인트 선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1월 하순경부터는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해왔던 외환시장도 동요하기 시작하여 환율이 급등세를 나타내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투매 현상이 속출하여 우리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외형상 좋은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공표되는 경제지표들의 허구성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상실이다.

흔히 이용되는 경제지표의 허구성은 교역조건악화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급속한 저하와 이로 인한 체감경기의 냉각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0년의 GDP성장률은 8.8%에 달했으나 교역조건악화로 인한 실질구매력(실질GNI)의 성장률은 전년도 수준(8.9%)보다 반감된 약 4% 정도로 추정된다. IMF경제위기가 발생했던 97년의 경우도 GDP성장률은 5%에 달했으나 실질GNI의 성장률은 2.1%에 그친 바 있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성장이 정보통신산업이나 수출비중이 큰 일부업종에 주도되었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이나 전통적 내수산업에서 종사하는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체감경기

는 총괄경제지표와 상당히 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금시장의 양극화현상도 경제지표의 허구성을 나타낸다. 종래에 시중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금융지표로서 총통화증가율, 국고채수익율, 회사채수익율 등이 있는데 이들 지표로는 시중자금사정이 작년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량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는 회사채 발행이 중단될 정도로 채권시장이 경색되었고, 주식시장 침체로 하반기에 들어서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워졌으며, 은행에 몰린 자금도 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 등 안전자산 취득에 더 큰 비중으로 운영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자금사정은 매우 악화되었다.

이처럼 우리경제는 외형상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총괄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총괄지표 자체도 머지않아 악화되기 마련이다. 총괄경제지표를 근거로 우리경제의 펀더멘탈(기초)이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정책을 운용했던 정책당국의 정태적인 자세가 IMF경제위기 때에 엄청난 정책적 시행착오를 유발했고 최근에도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감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의 최대 문제점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신감이 최근에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신감은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앞으로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한국의 기업경영풍토에 대한 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업경영풍토에 대한 불안이 기업경쟁력에 대한 불안을 낳고 이는 다시 국내외투자자의 불신을 유발함으로써 자금시장이나 외환시장을 교란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한국기업의 경영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합리적 노사문화 문제가 기업경영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

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세계화시대, 기술혁신의 시대에 기업과 노동자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같이 시대상황에 걸맞게 의식구조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경영혁신이 노조의 패쇄적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저지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비관적이다라는 것이 국내외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둘째,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불투명한 것도 경영인을 불안하게 한다. 서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도 최근에는 영미식의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접근해 가는 추세이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영미식의 시장경제체제가 효과적이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우리의 시장경제질서는 그 방향과 내용이 뚜렷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의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정치권 역시 지도력과 조정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집단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혼란상태가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구조조정의 지연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색이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98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정부주도하에 구조조정조치를 단행하였으나 국내외투자자들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있겠지만 개혁적인 차원에서 애로를 극복하여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당국과 집권당의 책무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가와 이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을 두려워하여 종래와 같이 구조조정을 형식화한다면 금융시장의 경색은 심화될 것이며 일본이나 중남미제국처럼 우리경제는 장기적인 복합불황국면에서 헤어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의 육성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 그리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엄청난 경영코스트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규제개혁과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시장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